

주제 발표

#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강 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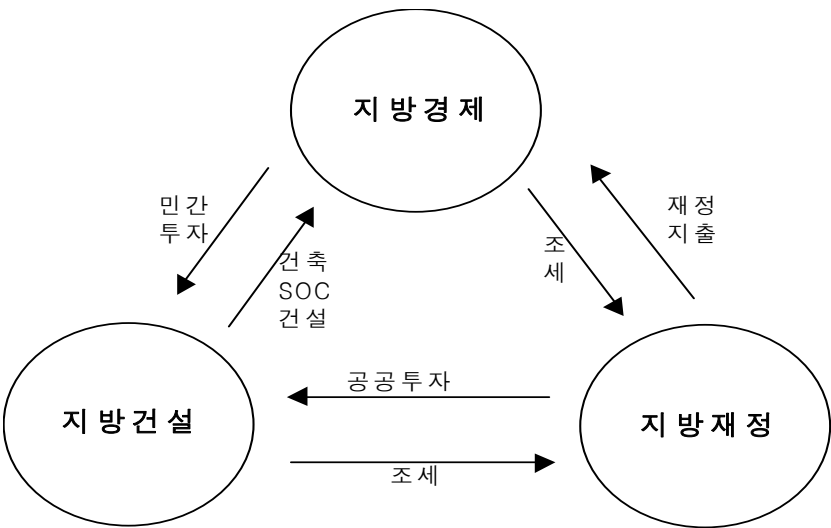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Ⅰ.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 1.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함<sup>1)</sup>.
- 이는 지역 경제, 지역 재정, 지역 건설 3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지출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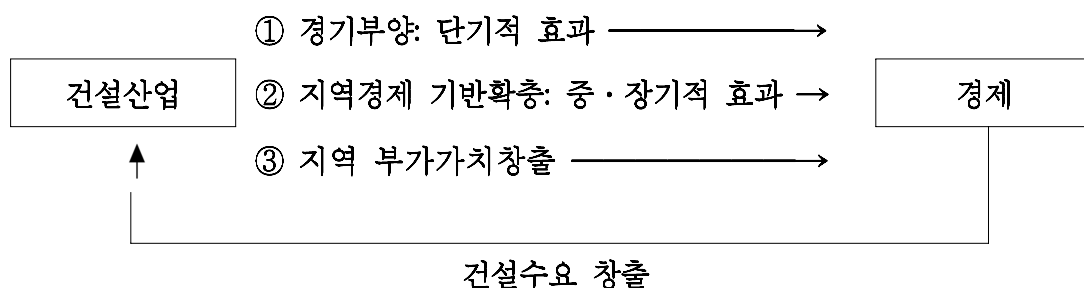


[그림 1-1] 지방경제·건설·재정의 상호 관계

1) 윤영선·강민석,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 건설 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역할

- 지역 경기의 유지 및 부양
- 지역 내 SOC 등 기반 시설을 공급, 궁극적으로 지방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 및 제공
- 지방 건설 산업은 지역 내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여 지방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



[그림 1-2] 건설산업의 역할

## 1) 지역 경기 부양

-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은 건설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 흡수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즉, 건설 산업을 매개로 한 건설 투자는 타 경제 또는 산업 활동보다 지역 내 산업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큼.
- 따라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또한 이러한 효과들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건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지방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됨.

-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 건설업은 생산, 고용 유발 등의 측면에서 타 산업과 비교하여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건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합계는 1,990임. 즉 10억원의 공공 건설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19.9억원의 총생산 증가가 이루어짐
  -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659, 제조업은 1,959로 건설업보다 작음
- 고용과 취업의 경우에도 10억 원의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면 17.9명의 고용이 이루어짐
  - 타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건설업보다 월등히 낮음

**<표 1-1> 산업별 최종 수요 10억원 증가시 건설투자 파급효과(2000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1,990	1,959	1,659
부가가치창출효과	836	627	714
고용유발효과	17.9	9.7	12.4
수입유발효과	164	373	286

## 2)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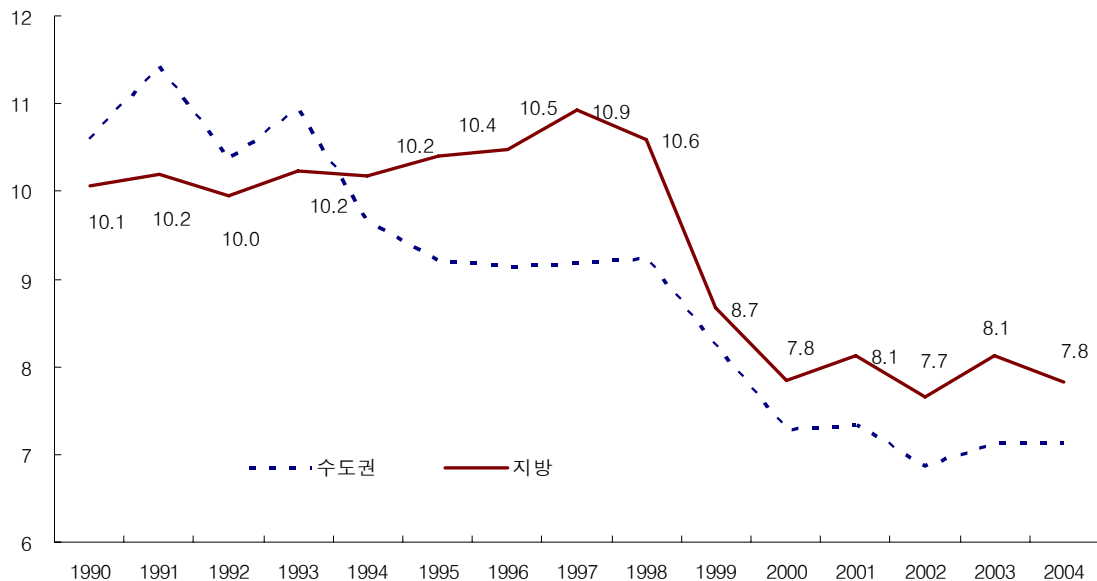
- 지역 내 SOC 등 기반 시설물을 공급, 확충하는 역할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역할중 하나로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 건설 산업은 지역 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발전소 등 지방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업용 건물 등 직접적인 지역 주민 생활 및 경제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공급함.



- 지방 건설 산업의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수요를 수주 받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건설 산업은 매개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 등으로부터의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경우 건설 산업의 지역 내 SOC 및 기반 시설물 등을 구축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건설 산업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 증대를 위한 SOC 등 기반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2. 건설산업의 위상

- 건설산업 생산이 지역 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에는 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크게 하락하여 8%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수도권에 비해 높음.



자료 : 통계청.

[그림 1-3] 지방 건설산업의 GDP 비중 추이

- 건설투자의 지역경제적 효과를 보면 지역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서울에 비해 지방의 건설산업이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타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큰 반면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낮음.
  - 건설투자의 유발효과를 100으로 가정하면 서울의 건설투자가 전국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87.26으로 전국평균보다 12.74%p 낮음.
- 반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건설투자가 타 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영향력이 큰 지역은 울산(전국 평균 대비 130.11%), 경북(전국 평균 대비 110.41%), 경남(전국 평균 대비 109.53%), 전남(전국 평균 대비 106.93%), 인천(전국 평균 대비 105.76%), 충남(전국 평균 대비 104.79%), 경기(전국 평균 대비 102.31%) 순임.

- 울산, 인천, 경남 등은 건설, 도소매 등 주요 3차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음.

**<표 1-2> 산업별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구 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평균
서울	87.26	120.97	103.01	95.31	112.13	109.10	92.99
부산	89.56	124.70	105.34	99.11	114.98	111.51	96.67
대구	98.48	102.07	107.16	99.77	104.14	100.45	99.37
인천	105.76	112.30	126.72	108.06	101.94	96.79	106.61
광주	93.60	86.27	90.23	98.82	105.20	94.58	94.24
<b>대전</b>	<b>92.43</b>	<b>92.95</b>	<b>87.59</b>	<b>98.35</b>	<b>102.61</b>	<b>100.57</b>	<b>96.49</b>
울산	130.11	98.85	119.81	107.62	110.93	102.44	123.96
경기	102.31	108.09	101.06	101.31	93.82	95.92	101.05
강원	88.36	94.26	86.14	93.15	93.47	94.19	88.02
충북	100.22	99.69	98.95	100.55	96.32	101.03	97.73
<b>충남</b>	<b>104.79</b>	<b>104.45</b>	<b>106.56</b>	<b>101.99</b>	<b>91.10</b>	<b>98.61</b>	<b>103.87</b>
전북	93.75	94.38	93.35	94.73	95.80	98.46	95.04
전남	106.93	82.01	85.02	100.41	89.82	97.75	104.86
경북	110.41	96.13	94.84	103.60	93.66	98.87	104.33
경남	109.53	96.56	106.99	103.99	94.94	104.97	108.92
제주	86.50	86.32	87.23	93.22	99.11	94.79	85.85
전국 평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전국 평균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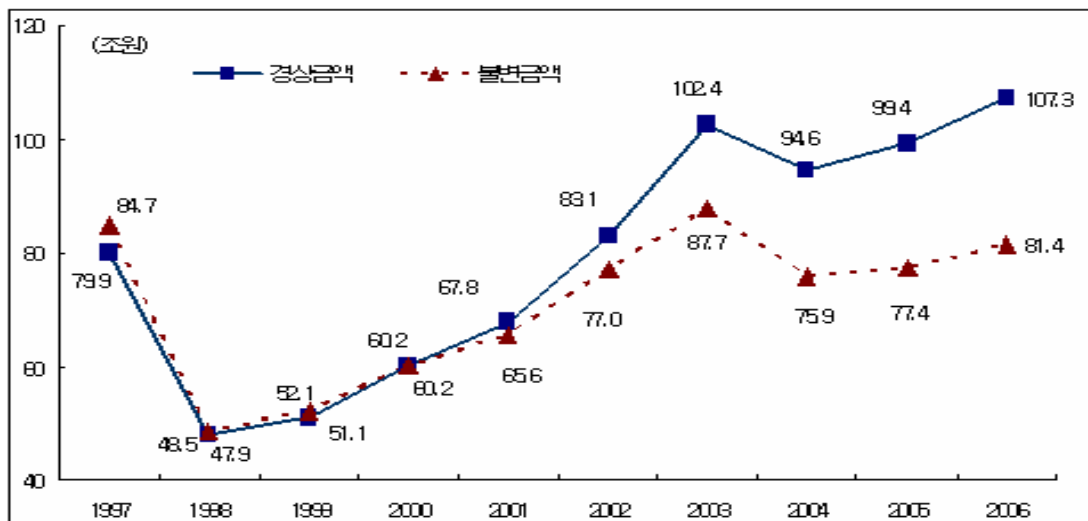
자료 : 김의준, '건설 투자 증대는 '서민층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 「건설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9

## II. 충남지역 건설업 현황 및 전망

### 1. 건설업 현황

#### 1) 전체 건설업 현황

- 2006년 건설수주는 재개발 수주 급증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한 107.3조원을 기록함.
- 2006년 건설수주는 경상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2003년에 못 미친 수준임.



[그림 II-1] 명목 및 불변 건설 수주 추이

- 2006년 건설수주가 호조를 이룬 것은 8월 25일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으로 재개발사업 시공권 조기 확보 차원에서 재개발 수주가 전년대비 158.2% 급증(14.5조)하여, 2006년 건축부문 수주 증가(전년대비 14.4% 증가) 및 전체 수주액 증가(전년대비 8% 증가)를 독자적으로 견인했기 때문임.

## 2) 건설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지표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체 규모별 양극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주증감율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 2006년의 수도권/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는 각각 122억원과 1조 1,183억원으로 2004년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임.
  - 수주증감율에서도 수도권과 대기업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과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의 수치로 나타남.

**<표 II-1> 수도권 · 지방 / 대 · 중소기업간 1社당 수주액 격차**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공공	민간	전체	공공	민간	전체	공공	민간	전체
수 도 권	30	75	104	36	91	127	35	123	158
지 방	20	20	41	20	27	47	15	21	36
격차			63			80			122
대 기 업	1,521	3,702	5,222	2,136	4,980	7,116	2,394	8,815	11,208
중소기업	16	22	38	14	23	37	10	15	25
격차			5,184			7,079			11,18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II-2> 수도권 · 지방 / 대 · 중소기업간 수주증감을 격차**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06.1/4	2/4	3/4	4/4
수 도 권	△11.7	5.0	12.7%	4.5	△17.2	46.9	26.1
지 방	4.1	5.4	△2.8%	△29.2	△10.3	2.7	12.8
대 기 업	0.3	8.0	20.6%	△6.2	△8.4	69.4	41.8
중소기업	△17.9	0.5	△13.2%	△7.5	△28.6	△15.9	△8.4

○ 2007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0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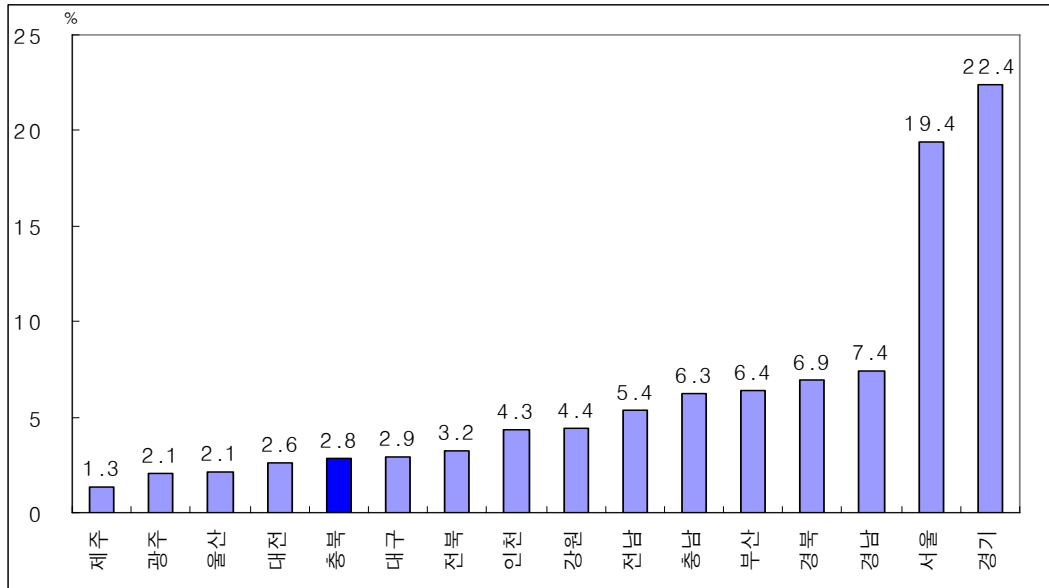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가 91.7, 중견업체가 76.9, 그리고 중소기업이 50.0을 기록함.
- 이로써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함.

**<표 II-3>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구 분	2006년 10월	11월	12월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0.1	82.8	78.7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9.0	82.3
규 모 별	대형	70.0	100.0	90.0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91.7
	중견	84.6	91.7	85.0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81.3
	중소	53.7	52.6	58.3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61.7
지 역 별	서울	71.5	89.9	82.1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6
	지방	67.7	67.7	71.8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64.0

### 3) 충남지역 건설업 현황

- 충남지역 건설 시장 규모는 전국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음(6위).



[그림 II-2] 지역 건설시장 비중

- 2007년 충남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 수주와 지금까지 충남지역 건설 시장 비중에 크게 못미치는 현황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표 II-4> 충남지역 건설업체 수주현황(2007년 1~7월)

(단위 : 억원, %)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75,083	73,468	95,387	93,166	87,763	134,104	76,842
증감율	-	△ 2.2	29.8	△ 2.3	△ 6.2	52.8	△ 42.7
충 남 (수주비율)	458 (0.6)	669 (0.9)	4,063 (4.3)	3,749 (4.0)	2,348 (2.7)	3,473 (2.6)	1,031 (1.3)
증감율	-	46.1	507.3	△ 7.7	△ 37.4	47.9	△ 70.3
기타지역	74,625	72,799	91,324	89,417	85,415	130,631	75,811
증감율	-	△ 2.5	25.4	△ 2.1	△ 4.5	52.9	△ 42.0

자료 : 관련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산출.

- 2006년 충남도내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도내 총계약금액은 32.4% 증가하였으나 도내 업체의 계약 실적은 1.6% 감소하여 도내 업체의 어려움은 증가하였음.

**<표 II-5> 2006년도 충남도내 계약물량 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5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도내 총계약금액	23,300	61,840	85,140	28,032	36,286	64,318
도내업체 계약액	9,185	7,238	16,423	11,617	5,078	16,695
외지업체 계약액	14,115	54,602	68,717	16,415	31,208	47,623

자료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 2006년 도내 총 계약물량(민간부문포함)중 도내업체 계약액은 19.3% 에 지나지 않음.

**<표 II-6> 2006년도 도내 일반건설업체 기성액**

구 분	2006년		2005년		비 고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기성액	3조8,827억	714	4조 454억	649	4.0%감소

자료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 Ⅲ. 충남지역 건설산업 침체의 원인

#### 1. 건설경기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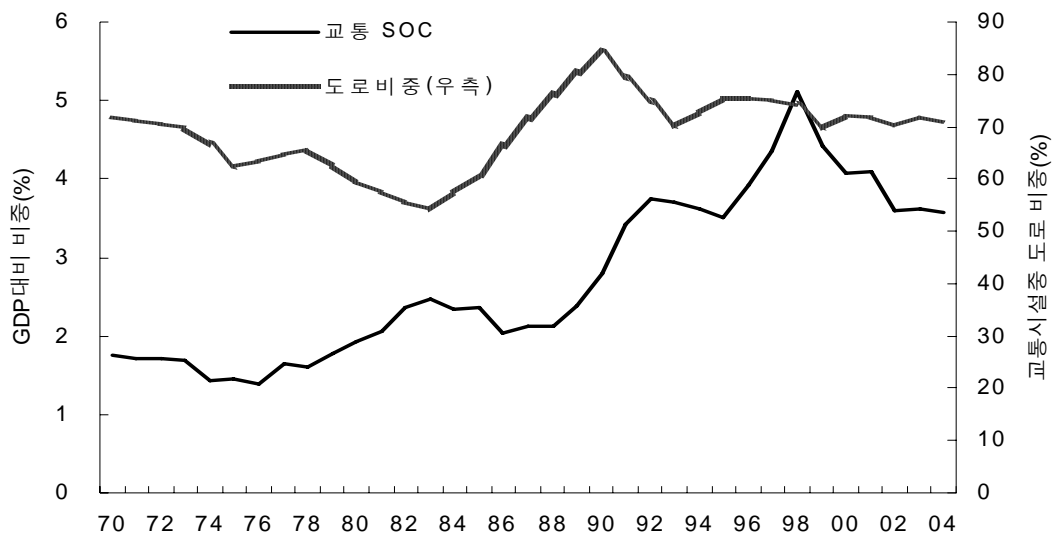
- 2006년 건설수주는 재개발 수주 급증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한 107.3조원을 기록함.
- 2006년 건설수주는 경상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2003년에 못 미친 수준으로 주택부문의 침체가 큰 원인.

#### 2. 토목투자 감소

- 토목투자는 '국민의 정부' 이후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SOC 예산 증가율은 1993~2000년까지는 19.1%였으나, 2000~2003년까지는 8.3%로 감소하였으며, 2003~2005년까지는 -1.9%를 기록함.
- 도로투자중 국도건설부문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가 전체의 교통 SOC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1990년대 4%~5%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3%대로 감소함<sup>2)</sup>

---

2) 안흥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국회 세미나 자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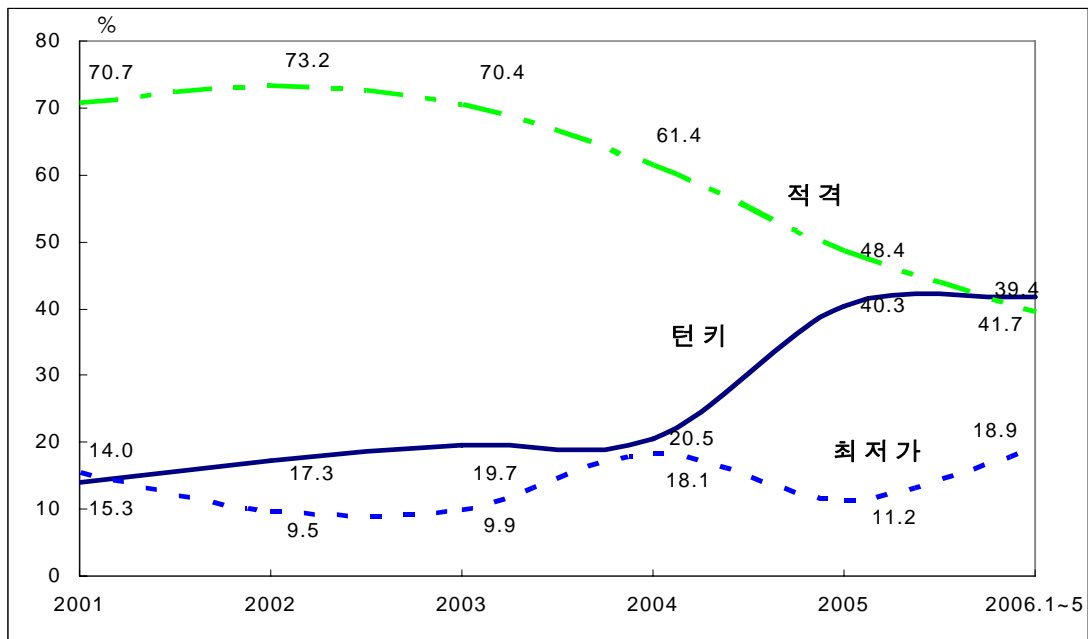


자료 : 안흥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국회 세미나 자료, 2006.8 재인용.

[그림 III-1] 국가전체 SOC의 GDP대비 비중 추이

### 3. 입찰 · 계약 제도의 변화

- 공공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발주 급증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가 크게 감소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주된 발주방식인 적격심사제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그림 Ⅲ-2]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수주비중 추이

- 2005년부터 학교 등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감소
  - BTL 방식은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학교시설, 하수관거 공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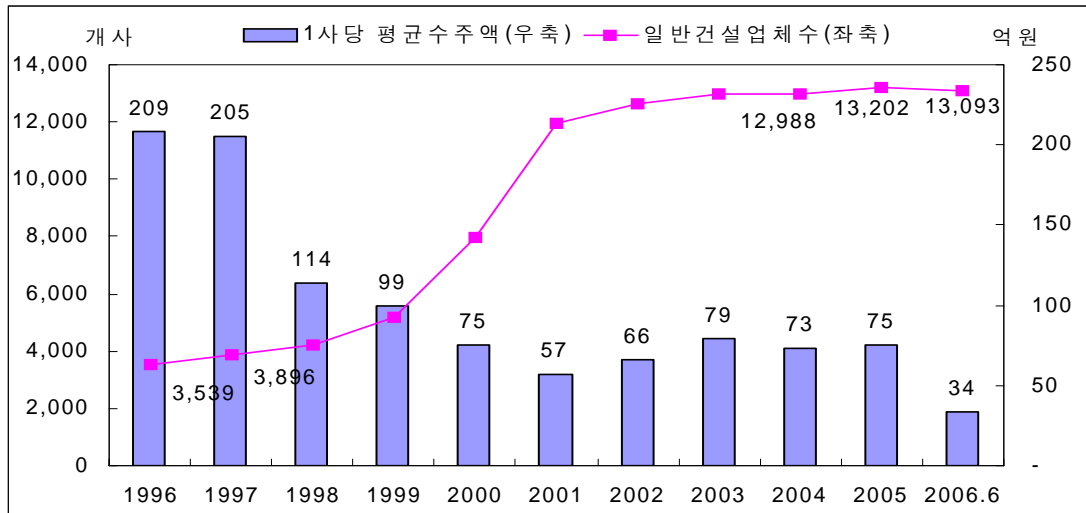
## 4. 건설업체 수 증가

- 건설시장 규모는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업체 수는 급증하고 있음
  -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등의 여파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수는 모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7년 대비 3.4배나 증가

<표 III-1> 건설업체수의 증가 추이

구 분	1997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건설업체	3,896	4,207	7,978	12,643	12,996	12,988	13,202	12,914
전문건설업체	24,167	25,432	31,823	36,665	37,120	38,328	41,052	40,415
주택건설업체	3,567	3,017	3,744	4,757	5,879	6,253	6,714	6,888
합 계 (개사)	31,630	32,656	43,545	54,065	55,995	57,569	60,968	60,918
년대비증감률(%)	8.2	3.2	13.6	5.1	3.6	2.8	5.9	-0.1
'97년 대비(%)	100.0	103.2	137.7	170.9	177.0	179.8	192.8	192.6

- 일반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은 1997년 209억에서 2006년 34억으로 83.7%가 감소함.



[그림 III-3] 일반 건설업체당 평균 수주액 추이

## 5. 주택 규제의 강화

-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구사하고 있는 여러 지역지정에 관한 규제들로 인해 지방의 주택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지난 9월 9일 충청권의 모든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으나, 이는 지방 주택시장을 크게 위축시킴.

## IV.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1.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

#### 1) SOC 투자확대

- SOC투자는 건설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SOC 투자에 의해 생산 및 고용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할 상황임
- 생활환경 개선, 대외 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2)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

- SOC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제도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음
- 교통시설 등 대부분의 SOC 재정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제도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분산투자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일상화시키는 폐단이 있음
- 교통시설 등 SOC 재정사업의 예산제도 운영을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계약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3) 부동산 규제의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

-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남발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방 주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음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허가구역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지역간의 차등화가 부족하고, 주관부처가 상이하고, 중복적인 내용도 있어 시장에 적잖은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

### 4) 입찰제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수주기반을 위축시키는 턴키, BTL 공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고려할 필요
- 대형 턴키공사의 분할 발주에 의한 중소기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충남도내 건설공사 발주 전문가 육성이 전제(발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분할 발주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
- 독일은 중소기업의 발주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사를 소규모로 분할 발주하는 것을 권장
- 일본의 경우도 분할발주를 원칙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의 경우 90%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
- 최저가 낙찰제 공사 지역중소업체 공동도급 확대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입찰가격 평가시 우대방안을 검토

## 5) BTL사업의 합리적 개선

- BTL 사업의 도입으로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기업체의 수주영역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가격 위주의 평가 개선 등 필요
-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 조정
  - 지역제한 입찰기준(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이하의 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 번들링 규모를 현행 500억에서 200~300억원대로 하향 조정
  - 학교시설사업 등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비율 대폭 하향 조정
  - BTL사업의 가격요소 배점 하향 조정

## 2. 도정(道政) 차원의 활성화 방안

### 1) 지역 건설 업체가 불필요한 과다 경쟁 방지 대책

#### 가. 부실업체 퇴출

-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수주난을 겪고 있는 데에는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신규업체의 급증과 건설업 등록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이 직접적인 큰 원인
- 대·중소건설업체의 상생방안 등은 경쟁력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립
  - 업체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업체 퇴출 시스템을 통하여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진입억제 및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 나.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 충남 지역은 행복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공사물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타 지역에 비해 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임.
-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특히, 지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 발주하도록 도 차원의 규정 정비 및 전문가 육성
  - 예를 들어 충청남도 건설 공사 분할 발주 조례 등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발주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 조치 강구

## 다. 입찰 우대 (bid preference) 제도<sup>3)</sup> 도입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지역업체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도에 반하여, 입찰우대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 수단임.
  -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며 연방 정부에 있어서는 약자소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특히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우대 제도를 활용.
  - 지역의 건설 및 우량 업체에 대해 입찰 우대제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과다 경쟁의 방지 유도

3) 강운산, 중소기업업체 경영실태 및 육성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참조



## 2) 충남도 행정지원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원 방안

### 가.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방안

-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하도급할 공사금액의 일정부분(60% 필요)을 지역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우선 민간건축공사의 사업계획 협의 및 인·허가 시, 지역업체와 하도급토록 방안을 강구하며, 원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예정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유도<sup>4)</sup>함.
  - 이외에도 하도급사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하도급공사 사후점검 반 편성, 현장 점검 및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우수 원도급사 표창) 등이 요구됨.
- 또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등록이 우선과제인바, 이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이 매우 중요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지역 공사를 수행하는 대형일반건설업체에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용이토록 하고 있음.
  - 포스코 건설의 경우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업체 등록을 운영

### 나. 조달청 위임발주의 자제

- 우선 지역공사는 조달청에의 위임 발주를 자제하고, 지역에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유도
- 충남도, 도 산하기관, 중앙 공기업 등의 지역공사에서 지역업체 등의 참가기회를 보장
  - 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발주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4) 강운산·김번욱, 인천지역 건설업 실태와 육성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참조

### 3)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앞으로 공공공사 건설물량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임.
-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고하는 것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건설 산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고용을 승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이 더 큼.
- 2005년 조사 결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사업다각화'로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30% 정도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간에서도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판단.

**<표 IV-1>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극복 과제**

구분	소계	영업력 강화	인재 육성	사업 다각화	경비 절감	기술 개발	인력구 조조정	중점사 업전환	기타
전체	304	145 (47.7%)	10 (3.3%)	79 (30.0%)	40 (13.2%)	7 (2.3%)	8 (2.6%)	15 (4.9%)	-

- 이에 충남도에서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표 IV-2>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임.

**<표 IV-2> 일본의 중소 건설업 신분야 진출 지원 제도**

구분	세부 내용	시행시기
농업분야 진출 지원제도	농지 리스 방식에 의한 농업 참가 지원	2003년
	금융 지원(제도 자금 융자 / 농업 신용보증 보험 / 농업 법인등에 대한 출자와 융자를 위한 체제 정비)	-
	지역·기업 협동 기반 정비 추진 대책(농업 참가 촉진 기반 정비 실증 사업등)	2005년
	농업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담당자 육성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담당자 종합 지원 사업	2005년
	농업 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신규 농업진출 촉진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신규 농업진출 촉진 종합 지원 사업	2005년
환경분야 진출 지원제도	토양오염 대책법의 시행	2002년
	폐기물 처리법의 일부 개정에 의한 「광역 인정 제도」의 정비	2003년
	학교 등 에코 개수환경 교육 모델 사업	2005년
	환경 카운셀러 등록제도	1996년
	지방 환경 대책 조사관 사무소 설치	2001년
복지분야 진출 지원제도	지역개호복지 공간 정비 교부금 창설에 의한 지역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2005년
건설관련 분야 진출 지원 제도	PFI 방식에 의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	2004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중소기업벤처 종합 지원 센터에 의한 전문가 파견, 세미나 등의 개최	2000년
	중소기업 재생 지원 협의회에 의한 중소기업 재생의 지원	2002년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가칭)의 창설	2005년
고용보호 지원 제도	건설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2004년
	신규·성장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1997년
	지역 고용 개발 촉진 조성금	2001년
	지역 고용 지원사업 특별 장려금	2002년
	중소기업 기반 인재 확보 조성금	2003년
	중소기업 고용 관리 개선 조성금	2003년
	신규 노동력 수급 조정 시스템 등을 포함한 향후의 건설 노동 대책의 검토	2005년 이후
	건설업 신분야 정착 촉진 지원금(가칭)	2005년
노동자 능력개발 지원제도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 능력개발 조성금	2001년
	건설업 신규성장 분야 진출 교육 훈련 조성금	2002년
종합적 신분야진출 지원제도	윈스톱 서비스 센터의 설치(건설업 신분야 진출 촉진 지원 사업)	2005년
	지역의 중소중견 건설업의 신분야 진출 촉진 모델 구축 지원 사업	2005년
	「건설업 신분야 진출 세미나」의 개최	2004년

자료 : 강운산, 일본 중소건설업체 신시장 진출 사례 연구, 2005.11 재인용.

#### 4)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 협의회 성격의 변경 : 필요적 기구
  - 도지사 또는 도의회 직속기구화
- 분할 발주, 하도급업체 등록 등 지역하도급 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 사용 확대, 지역건설업체 사업다각화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최소한 구청 단위까지 하위 부서를 설치 운영
- 최근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
  -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에 가장 효과적인 지역업체 지원 방안 선정